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 국회 비준 동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도 공포

과학기술부는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기구 설립 협정' 및 '특권·면제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2001년부터 각국 정부대표 및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12차례의 협상회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2006년 11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대통령 주재하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7개국(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장관급 대표들에 의해 서명된 바 있다.

이번 국회 비준 동의 완료로 우리 나라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 주요 과학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하여 최적의 미래형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핵융합에너지라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는 물론 세계 핵융합발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일정으로는 모든 참여국이 비준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기탁 후 30일이 경과함으로써 동 협정들이 공식 발효되면 금년 하반기 'ITER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가 공식 출범하게 되며, 무한·청정 대용량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ITER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후속 조치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이 그 동안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고, 3월 2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가핵융합에너지 개발계획의 국가적인 관리체계 및 지원방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방향 설정과 로드맵이 도출될 전망이다.

신규 대형 국가 R&D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미래국가유망기술 파이오니아사업' 등 3개 사업 대상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미래국가유망기술 파이오니아사업(과학기술부)', 'IT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정보통신부)' 나노·광 응용 해양조사장비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사업(해양수산부) 등 3개 대규모 신규R&D사업(총사업비 3천651억 원 규모)에 대해 '07년도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대형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제도가 의무화(07.1.1일 부)된 이후 첫번째로 진행되는 타당성 검증 사업으로서, 지난 1.31~2.14간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8개 부처 19개 사업(총규모 6조4천억 원)에 대하여 국가 정책적 필요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검토와 사전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07.3~6월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기술적 측면(기술계획의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등), 정책적 측면(국가 전략적 중요성 및 위험요인 등), 경제성 및 파급효과 측면(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에서 분석하여 종합결론을 내릴 계획이며, 조사결과는 2008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R&D예산조정배분과정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올해 생명공학육성 및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 확정

생명공학 분야 8천515억원, 줄기세포연구 342억원 지원키로

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3일 생명공학융합정책 심의회(위원장 : 과학기술부총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200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과 '2007년도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8개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는 올해 생명공학 분야에 과기부 2천472억 원(29%), 산자부 1천714억 원(20%), 복지부 1천499억 원(18%), 농림부 851억 원(10%), 교육부 624억 원(7%) 등 총 8천515억 원 규모를 투입하게 되며, 영역별로는 연구개발에 6천 903억 원, 시설 및 기반 구축에 1천252억 원, 인력양성에 359억 원 등이다.

올해는 Bio-Vision 2016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로, 국가 생명공학육성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바이오소재, 노화제어 등 기술 경쟁력 우위 분야와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클러스터의 종합발전 방안의 추진 등 생명공학 분야의 조기 산업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2007년도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은 지난해 5월 확정된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처음 수립한 시행계획으로 정부(5개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는 올해 줄기세포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 개원



구에 총 342억 원을 투자한다.

부처별로는 과기부 181억 원, 복지부 112억 원, 산자부 40억 원, 농림부 11억 원 등이며, 영역별로는 연구개발에 276억 원, 인프라에 59억 원, 법·제도 개선 부문에 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배이즐기세포연구의 경우, 분화와 같은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배이를 파괴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연구가 시도될 것이며, 성체 줄기세포연구의 경우, 질병·병원 중심의 응용연구 강화를 통해 실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2007년도 엔지니어링 인턴과정' 이공계 대학졸업자 모집

과학기술부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2007년도 엔지니어링 인턴과정 연수희망자와 이들을 활용할 연수업체를 올 연말까지 수시모집한다.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인턴과정 지원사업은 이공계 대학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엔지니어링서비스 업체에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06년도(예산 4억 원)에는 총142명의 연수생 중 86명이 국내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에 취업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예산 4억 원)는 응모한 이공계 대학졸업자(졸업 후 2년 이내) 및 졸업 예정자(2007년 9월) 가운데 학점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 우수한 어학실력(TOEIC 700점 이상 등)을 갖춘자 중에서 100명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해외 인턴과정을 신설하여 선진국의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의 실무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과 연구개발업무 및 암진료·국가방사선 비상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 4월 5일 개원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초대원장으로는 김종순 전 방사선보건연구원장이 임명되었으며, 의학원의 사업,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될 이사로는 과학기술, 경영·행정, 법률분야의 사회 저명인사와 방사선분야 전문인사 13명(이사장 이태섭)이 임명되었다.

그간 원자력의학원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부설기관으로 있었으나, 국민 삶의 질 향상, 고령화 심화에 의한 방사선 의학기술의 이용증대 등 의학원의 역할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이번엔 연구소에서 분리·독립하게 됐다.

연수희망자 및 참가 희망업체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홈페이지 www.ken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가 가능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투명해진다

4월 2일,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확대시행 공고

산·학·연 연구주체들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상향 표준화하여 정부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확대 시행계획이 지난 4월 2일 공고됐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동 제도의 확대시행에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시범실시 결과에 대해 지난해 12월 정부합동평가를 하고, 지난 2월 동 제도의 확대 시행 방안을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바 있다.

연구비관리 인증기관은 최근 3년간(2004~2006)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산·학·연 연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관리 및 회계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단의 평가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시행으로 연구기관의 투명한 연구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연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되어 연구비 부당집행을 사전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구비관리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연구비 정산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자율성의 확대와 책임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인 한마음 등산대회’ 가져



지난 4월 2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산·학·연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전지역 계룡산에서 한마음 등산대회를 가졌다.

500만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등산대회는 작년에 이어 2회째로, 올해는 과학기술부 출범 40주년이 되는 과학의 달에 뜻 깊은 행사로 마련되었다.

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등산대회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50여개 기관에서 500여명의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했다.

등산을 위해 20명씩 1개조로 하여, 각 조에는 산·학·연의 균형 있는 분산 편성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어울려서 단결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등산 코스는 동학사에서 출발하여 남매탐을 돌아오는 6.1km의 코스에, 약 2시간 30분가량 소요됐다.



‘2007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후보자 접수중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혜숙)는 (주)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여성과학자, 기술자 또는 연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 여성과학자상'의 제2회 수상후보자를 접수하고 있다. 총 상금 7천만원 규모의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은 한국의 여성과학자상으로는 가장 큰 상으로서 시상은 과학대상(1인.3천만원), 과학기술상(2인.각1천만원), 신진과학자상(2인.각5백만원), 진흥상(1인.1천만원)으로 총 4개 부문에 걸쳐 이뤄진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5월 31일까지이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로 확정되고, 시상식은 8월 29일에 거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과학 홈페이지(www.kofwst.org) 또는 전화 02-565-3701로 문의하면 된다.

과학기술부, YTN과 과학방송채널사업 공식협약 체결

공식채널명, 사이언스 TV(SCIENCE TV)

과학기술부가 (주)YTN과 과학방송채널사업 전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월25일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던 (주)YTN은 이 협약 체결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과학방송채널 사업을 수행할 공식사업자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과기부는 향후 3년간 과학방송 제작·편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작·구매 비용으로 연간 4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앞으로 (주)YTN은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승인받아 올해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 방송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께 시범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다.

한미FTA타결, 과총외 3개 과학단체 '성명서' 발표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협상에서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논의된 과학기술 부분은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술사 상호인정, 원자력에너지, 전략 기술·물자 통제, 연구개발 부문 등 5개 분야다.

한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3개 과학단체는 한미FTA 타결에 즈음한 성명서(아래)를 지난 4월 13일 발표했다. ㉮

[성명서]

한·미 FTA 파고를 과학기술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은 500만 과학기술인의 이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우리에게 한·미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한·미 FTA는 분명 우리의 17배에 달하는 거대한 미국시장을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요소이다.

물론 이는 농업, 제약, 서비스 등 경쟁기반이 극히 취약한 일부 우리 산업분야에 있어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취약산업도 보호만으론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미 FTA가 가져올 거대한 미국시장의 기회를 100% 활용하고 일부 국내 산업에 대한 위협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경쟁력 강화이고 국제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과학기술력이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 이후 후속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주요 시책으로 필히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지원·보완대책도 단순한 규제와 보상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이번 한·미 FTA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21세기 개방화, 선진화 시대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종식하고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대립도 온 국민이 함께 슬기를 모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07. 4. 1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